

### 재판거래 의혹 싸고 대법원장·대법관 정면 충돌



- 대법원장 “의혹 해소 필요, 수사 진행 땀 모든 자료제공”
- 대법관들 “의혹 사실무근, 재판 관여 있을 수 없는 일”
- 사법행정권 남용 후속조치, 관련 법관 13명 징계 회부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두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정면 충돌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관 13명 전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한 목소리로 이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관들은 상고심 재판의 연결성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의사 등을 밝히며 의혹을 인정하자 매우 격앙된 분위기에서 입장문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양승태 코트(court)’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관련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검찰 수사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하여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법원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한 수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면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선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이미 이루어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처럼 입장을 표명하자 대법관들은 발끈했다. 2시간가량 후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입장’을 대법관 일동 명의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별조사단을 이끌었던 안철상(61·15기) 법원행정처장도 대법관 자격으로 참여했다.



대법관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관들은 이것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선언했다.

대법관들은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부와는 엄격히 분리돼 사법행정 담당자들은 재판사무에 원천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면서 “대법원의 재판은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이 각자의 의견을 표시해 하는 것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대법원장 역시 재판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독립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에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서는 그 누구도 특정 사건에 관해 자신이 의도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거래 의혹은 터무니 없는 의혹 제기엔 불과한데도 김 대법원장이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입장문을 따로 낸 이유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상고심 재판의 연결성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급박한 심정에 따른 것으로 안

다”며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최종 발표하면서 재판거래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들이 사실상 대법원장과 정면 충돌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일부 대법관들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외국에서 대한민국 판결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걱정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길에 ‘대법관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법행정의 총책임은 맡는 저의 입장과 재판을 맡는 대법관들의 입장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사법불신 개혁조치가 필요하고 의구심을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선 (대법관들과 저의) 의견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3명의 법관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재판업무 배제조치를 했다.

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을 지시했다. 사법부 스스로가 지난 잘못을 잊지 않고 시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의미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 여러분의 질책과 꾸짖음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을 넘겨 받게 된 검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법부 차원의 고발이나 직접적인 수사의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시민단체 등의 고발 건수는 지금까지 17건에 달한다.

(법률신문 인용)

## 법무매거진

# 문재인 대통령 “檢 재수사 인권침해” Vs 문무일 “절차 촘촘해야 인권보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경수수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의 핵심으로 ‘인권보호’를 앞세워 사실상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놔 주목된다. 현재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1. 文 대통령 “수사는 한번만, 검찰 재조사는 인권침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다. 이건 국민의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무일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가진 청와대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나오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는 경찰 단계로 끝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경은 그동안 동일하게 수사권 조정이 인권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해법(조정안)에 대해 선 입장이 확연히 달랐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간섭을 줄이고 수사 종결도 경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맞닿아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와 검증 절차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독자적 수사권 강화를 요구해온 경찰 손을 들어준 발언으로 해석된다.

## 2. 檢 조사중 자살 연 10여명 Vs 수사결론 변경 연 4.6만명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까지 견제없이 독점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비대해진 검찰의 권력을 줄여야 검찰의 권한남용에 따른 인권 침해 방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2014년까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피의자는 108명에 이른다.

반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사법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이 경찰에서 강제수사를 받을 때 법률전문가인 검찰이 스크린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핵심은 인신 구속 등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기관의 영장은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발부라는 과정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이는 법률 비전문가인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찰의 수사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된 사건은 인원수 기준 4만6994명에 달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범죄수사는 체포, 구속 등 인신확보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촘촘하게 2중 3중으로 견제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사법통제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인용)

## 법무매거진

# [양승태 사법농단] 전국 변호사 2000여명 시국선언 - ‘법조계 붕괴 위기’



〈이찬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회 회관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국의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시도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변호사들은 법원 내의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검찰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련자 고발 등을 촉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변호사회관 앞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양승태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의 변호사 200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단체 등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을 낸 적은 있지만, 시국선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대표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하며 현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우리 헌법의 본질적인 가치이자 핵심이기에 이번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 역시 사법부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사법부는 전혀 합일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결코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원이 변호사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법원의 정책에 동조하고 법원과 연결돼 전권예우를 받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가면 법원 뿐 아니라 변호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위은진 변호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바래왔지만 여전히 자정의지는 없어보인다.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 사법권의 독립을 무참히 버리고 있다”며 “검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법원은 적극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이상의 셀프조사는 의미가 없다”라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수사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기소해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지원 변호사는 “재판을 협상도구로 생각한 문건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끝까지 추락했다”라며 “특별조사단 스스로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만큼 직권남용에 대한 의견은 다르더라도 당연히 관련자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이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해 초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 모임과 법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뒷조사’ 지시를 거부하며 행정처 심의관직에서 물러난 이탄희 판사의 부인이다.

변호사들은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410건의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지난 5일 98건의 문건을 공개했지만 이후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건 전부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마치고 대법원까지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행정처에 회원들의 연명이 담긴 시국선언문 등을 전달했다.

(경향신문 인용)

법무매거진



다음주 인사 앞두고...  
 검찰 내 TK라인 잇따라 사의 표명

- 공상훈·안상돈 검사장 잇따라 사표, 검찰 내 TK라인 퇴조

여당의 지방선거 대승으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동력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고참급 검사장 두 명이 잇따라 용퇴 의사를 밝혔다. 다음 주 발표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출신 검사장들이 일제히 물러나는 양상이다.

공상훈(59·사법연수원 19기) 인천지검장은 14일 검찰 내부통신망 'e프로스'에 “내가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이 총장을 중심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하겠다.”고 고별사를 남겼다. ‘왕재산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됐던 공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연수원 한 기수 후배다. 같은 날 안상돈(56·20기) 서울 북부지검장 역시 e프로스에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2일에는 김강욱(60·19기) 대전고검장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3명은 모두 출신지가 대구·경북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한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무릇 현명한 사람은 들고 날 때를 아는 법인데 지난 정부 때 번성했던 검찰 내 TK라인이 퇴조 양상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상훈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최경환(63·구속) 의원과 대구고 동문이다. 안 지검장 역시 경북 김천 출신이다. 김강욱 고검장은 경안동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고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청와대에서 초대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사의의 뜻을 밝힌 이들 중 일부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향을 예들러 비판하기도 했다. 김강욱 고검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검찰개혁 관련 정부 안이 곧 발표된다는데 검찰 구성원에게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안상돈 검사장도 “밤낮없이 업무에 매진해 온 검찰 구성원들이 비난을 받고 권한을 박탈당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고 썼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검사장 승진 인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대검과 조율과정을 거쳐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인용)



## 법무매거진

# 대법원, 14년만에 '종교적 병역거부' 재논의... '사회변화'



2004년 이후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존중해온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심리 중인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는 8월 3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8월 공개변론이 끝나면 이후 2~4개월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여하는 최종토론 절차를 거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두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현역병 입영과 예비군 훈련 소집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한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14년 만이다. 국내·외 사법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에 서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수가 100건이 넘고, 하급심에서도 재판부별로 판결의 유·무죄 판단이 갈리면서 다시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약 3년 동안 하급심에서 여러 건에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자 검사가 상고한 사건도 3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사법부의 판단이 제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리에서는 병역법과 예비군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8일부터 국방부와 병무청,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한국법철학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12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중앙일보 인용)

## ‘1세대 인권변호사’ 최영도 前 인권위원장 별세



법조인 동정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최영도 변호사가 지난 6월 9일 별세했다. 향년 80세.

서울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인권 향상과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 노력해온 ‘1세대 인권변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맡아 양심수 석방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수배자 해제 등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섰고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최 변호사는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61년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로 임관했다. 1973년 변호사 개업 후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거쳐 2004년에는 제2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영도 변호사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빈소를 찾아뵙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글을 올린다.”며 “선배님은 엄혹했던 독재정권시대 1세대 인권변호사로서 후배들에게 변호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표상이셨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제가 정치에 뛰어들 후 늘 걱정하며 한결같은 격려를 보내주셨고 저의 당선을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존경하는 선배님, 최영도 변호사님의 영면을 빈다.”고 적었다.

미술품에 조예가 깊었던 최 변호사는 한국고미술협회와 한국화랑협회 고문으로 활동했다. 2001년에는 30여 년간 수집해온 토기 16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아잔타에서 석불사까지’라는 제목의 불교미술 관련 저서를 출간했다.

(동아일보 인용)

## 법무매거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AACC 국제회의 참석



법조인 동정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30일에 열린 ‘AACC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 개막식 축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30년의 경험과 70년의 세계인권선언의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준다”면서 “첫째, 민주주의 존중, 법치주의, 인권 존중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그러한 힘든 수고는 결국 귀중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ACC의 모든 곳에서 협력의 정신을 아우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6월 1일까지 이어지는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는 ‘AACC 회원기관의 관할권과 조직’을 주제로 각국 대표들이 소속 헌법재판기관의 조직 구성과 헌법재판 관할, 주요 결정례 등을 발표한 후 전체 토론하는 방식이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시아 헌법재판 관련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AACC 헌법재판기관 자료집 작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김헌정 사무처장 겸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AACC 사무국 운영 경과 및 의의와 AACC 연구사무국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AACC SRD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다양한 기관을 연결하여 헌법재판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 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번 제1차 연구관 국제회의를 주최한 AACC 연구사무국은 아시아 16개국 헌법재판기관들의 협의체인 AACC의 상설사무국으로서 2017년 1월 서울에서 출범했으며,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제기구입니다.